

2024. 11. 15.[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2024년 11월 15일 (금) 09: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청민 의원,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
부, 온플법제정추진 100일 긴급공동행동

〈배달 자영업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상생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상생안을 소상공인들은 조삼모사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이를 그대로 상생안이라고 발표하고 소상공인에게 상생을 위해 양보하도록 강요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상처만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상생안의 경과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플랫폼 이용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23일 발족하였습니다. 당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는 6.8%, 서울 기준 배달비는 3,3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 지난 8월 배달의 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9.8%로 기습 인상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3% 인상하였어도 배달비는 2,900원으로 낮추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분노만 샀습니다.

이번 상생안도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여 상위 35% 이상은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견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출범 당시 수수료와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한 것입니다. 배달앱사에 대부분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자영업자는 상위 35% 구간에 속하므로 배달앱사는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35% 미만에서 보는 손실을 35% 이상 구간에서 메꾸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의 운영방식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하겠다” 라고 운영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12차 회의까지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는데 소비자 대표, 외식업 전문가로 위촉된 공익위원 두 명이 회의 중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논의 결정과정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율협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상생안 발표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들이 중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협의체의 제11차 회의에서 중재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이어야 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생안이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배달앱 이용료 수준보다는 낮아야 하고, 수수료와 배달비를 변동하면서 조삼모사식으로 상생안을 제출하는 배달앱사에 대한 주의 차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계가 제출한 최종 상생안을 반려하고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재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배달앱사들은 점주 부담 배달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원칙을 무시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를 버젓이 인상하여 가져왔습니다.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중재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소상공인들에게 양보만 강요한 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무능할지라도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수료와 배달비만 조금 손댄 변경안이었고, 그동안 이 협상이 배달앱 업체의 술수에 철저히 농락당한 결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상생안에서 우대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대 수수료를 제도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 대형 브랜드의 마케팅과 프로모션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점업체들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이상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아야 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96% 이상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생안에서는 하위 20%에게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이는 우대수수료라는 선심만 쓴 셈으로 배달앱사들이 소상공인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째로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드러난 자율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율규제의 허상에 대해 수도 없이 지적하였고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대등한 거래관계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인 상생협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거래액 기준 하위 40% 숙박업소에만 1년간 1%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허울뿐인 상생합의를 정부는 자화자찬 하지만 숙박업체들은 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단 숙박업 뿐 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등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는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소극적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더 이상 무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지배력과 와우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